

작은사업장 안전파수꾼? 첨단기술 말고 현장 노동자!

임용현 상임활동가

[코너 소개] '작은사업장 노동it수다'는 일터에서의 존엄과 평등을 꿈꿀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돌아보며, 권리가 보장되는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코너입니다. 본 코너의 글은 안산공동체라디오 <단원FM>에서 매달 1회 방송하는 노동 이슈 전문 프로그램 '월담의 노동it수다' 진행 대본을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스마트 안전기술의 허와 실

용현: 건희 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건희: 네. 최근 정부가 소규모사업장 안전대책으로 내놓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방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용현: 스마트 안전장비요? 작은사업장이 대표적인 중대재해 취약지대로 지목되는 이유가 단지 이런 기술이 부족해서만은 아닐 텐데요.

건희: 맞습니다. 물론 작은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면 기술적·재정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작은사업장 산재예방 주요 대책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은 여러모로 우려가 큼니다.

용현: 그러게요. 요즘 들어 스마트 기술에 관한 관심이 한껏 고조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AI나 자동화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기술이 앞으로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럼 스마트 안전장비가 작은사업장에 도입된다고 할 때 어떤 파급효과를 일으킬지 궁금한데요.

건희: 우선 정부의 지원 계획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기

술적·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과 작은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들 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현장에 스마트 기술을 전략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하네요.

용현: 말씀대로라면 정부 계획은 이들 노동안전 취약 사업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신청하면 무조건 사다주는 게 아니라, 해당 장비의 운용 계획을 보다 면밀히 따져 보겠다는 거군요.

건희: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스마트 장비 활용계획이라든지, 도입 전후 현장에 나타난 효과를 비교 검증하는 등의 방법을 정부가 강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현: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신청해서 스마트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은 결국 사업주의 의중에 달린 일 아닌가요? 가령, 스마트 장비의 도입 필요성을 두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건희: 네. 정말 중요한 문제점을 짚어 주신 것 같아요. 정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대책의 핵심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말하지만, 작은사업장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기대하기란 무척 힘들죠. 스마트 장비의 도입 여부는 사실상 사업주의 판단에 전적으로 내맡겨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술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접근법 바꿔야

용현: 한편으로는 이러한 스마트 장비의 도입 목적이 ‘안전’이라고 하지만, 그 목적에 실제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건희: 최근 한 건설기계 전문 언론매체에서 해당 장비들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보도됐더라고요. 이 언론보도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건설업계 안전관리자 1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72%(86명)가 ‘투입 비용 대비 스마트 안전장비의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반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17%(21명)에 그쳤고요.

용현: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효과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70%를 넘는다니 그것도 참 놀랍네요. 응답자들이 그렇게 본 이유는 왜일까요?

건화: 현장 안전관리자들이 꼽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장 적합성 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점이 ‘불편한 사용·관리’였는데요. 예를 들어 장비 운용을 위한 충전과 데이터 전송, 관리 서버 모니터링 같은 부가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데다가, 정부나 본사에 보고하기 위한 서류 작업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관리자 본인의 업무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게 대부분 응답자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 2026.02.12 <월담의 노동t수다> 70회 방송 '한노보연의 노동자건강권 이야기' 코너 진행 모습.

용현: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나 불편함을 느꼈는지 이제 좀 알겠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실질적인 안전역량 강화나 현장 여건의 개선보다는 너무 형식적인 안전 조치나 행정적인 실무 처리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나: 정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안전 조치라는 게 결국은 일선 현장의 여건을 잘 모르고 무분별하게 스마트장비를 도입했다는 말과도 같은 맥락이니까요. 관련 보도에서 한 건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도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기술인지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용현: 역시나 그동안 보여주기식, 주먹구구 도입 관행이 문제였던 모양이군요. 일선 현장의 안전관리자들도 ‘스마트 안전’이라는 기치 아래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것 같네요.

건화: 네. 그래서 이런 기술 중심의 접근보다 위험에 대응하는 노동자의 역량과 권리를 증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현: 스마트 안전기술이 도입되면 금방이라도 현장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가 요즘 들어 파다한데요. 이런 접근 태도가 보이는 위험성을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건희 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건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첨단기술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스마트 안전기술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기술 도입에 앞서 그 기술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밀한 진단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테고요. 기술이 노동자의 위험에 대한 통제 권리를 뒷받침하고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